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 제 3 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

2013년 12월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 전공

황현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용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 제 3 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nter rea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 Focuseding on the third North
Korea's nuclear test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 전공
황현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용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 제 3 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nter rea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 Focuseding on the third North
Korea's nuclear test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 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 전공
황현식

황현식의 안보전략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대응전략 연구 - 제 3 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사전략 전공
황 현 식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김정은 정권 출범 1년에 즈음하여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극복하고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 평가된다. 특히 제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탄(HEU) 제조 가능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 개발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이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제1차 핵 위기로부터 20여년, 6자회담이 진행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등을 통해 우리의 핵 주권을 유보하면서 대북협상, 경제적 지원, 한미공조에 의한 군사적 위협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제3차 핵실험까지 도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전략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물론 6자회담이나 다자간 회담등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북한문제가 해결되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

만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강력한 핵보유의 의지를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군사적 대응전략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먼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현실주의적 관점과 북핵문제 해결을 핵 억지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제1, 2차 핵개발 진행과정과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6자 회담의 진행과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 3차 핵 실험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수준, 위협의 정도 등을 살펴봄으로서 북핵 문제의 현 실태와 위협을 확인하였고, 3차 핵실험 이후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체제의 유지를 위해 절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비하지 못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이 큰 탓도 있지만, 대응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눈을 감는다고 핵위협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여러가지 군사적 대응전략들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핵 억지 효과면에서의 현실적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최선의 군사적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어】 핵 억지전략, 예방적 자위권, 군사적 대응전략, 미사일 방어체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현실주의 이론	4
1. 전통적 현실주의	5
2. 신 현실주의	7
3. 방어적 현실주의	9
4. 공격적 현실주의	10
제 2 절 핵 억지 이론	12
1. 핵 억지 전략	12
2. 예방적 자위권	14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15
제 3 장 북한의 핵개발 진행과 주변국 반응분석	17
제 1 절 북한의 핵개발 진행 분석	17
1. 핵개발 과정과 위협	17
2. 6자회담의 진행과 한계	23

제 2 절 제 3 차 핵실험과 주변국 반응분석	26
1. 제 3 차 핵실험 배경과 의도	26
2. 제 3 차 핵실험 수준과 위협	30
3. 주변국 반응분석	34
제 4 장 군사적 대응전략과 향후전망	48
제 1 절 군사적 대응전략	48
1. 자위적 핵 개발 전략	49
2. 전술핵 재도입 전략	50
3. 핵억지 강화 전략	51
4. 선제타격 전략	52
5.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략	54
제 2 절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과 향후전망	55
1.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55
2. 향후전망	57
제 5 장 결 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비교	19
<표 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성능	27
<표 3> 진도별 핵폭발의 위력 추정치	31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16
<그림 2>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2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끝내 제3차 핵실험을 강행 하였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약 3년 9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떠한 형태의 협상이나 회담을 통한 합의,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도 북한의 핵문제를 풀 수 없음이 증명된 셈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핵문제가 수면위에 오른 이후로 약 20여년 동안 수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합의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책 사이에 길을 잊고 주인 의식도 가지지 못했다.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 붕괴론을 내세웠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돌아섰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 대북 원칙론으로 돌아서면서 냉랭한 남북관계가 이어지는 사이 북한은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이 대북제제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북한을 감싸주는 한 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에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이전과는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 된 원자탄’이라는 점과 함께 다종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여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에는 사거리 1만km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성공 하였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대기권 진입 기술의 확보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핵무기를 전력화 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제작기술을 확보했다면 북한은 실질적 핵무장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확보한 원심분리기 2,000기로 우라늄을 농축하여 연간 약 2~3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는 연변의 핵원자로를 가동하여 총 40

~50kg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핵탄두 약 9~12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은 증강된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정권이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장거리 미사일 등에 장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실전배치 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 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핵무기의 양상 체제를 갖출 것이고, 결국 북한은 핵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선불리 북한 대한 대응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으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하여 더욱 발전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정부는 6자회담과 외교적인 노력 등에 치우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유일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충분하게 제공 될 지 의문이다. 비록 한미동맹이 60년간 꾀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바뀔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문제인 안보는 절대 다른 국가에 의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이제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는 표현’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전략들의 실현가능성과 핵 억지 효과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므로써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대응방안이 시급함을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핵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대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수 많은 훈련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파동적이었고, 적극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도 6자 회담에만 의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정세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모른다.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는 것이 국제 사회의 현실이다. 국가안보 만큼은 다른 국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주로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저명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전문가의 학술논문과 단행본, 정부기관의 대외 발표자료 및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지도교수의 지도와 각종 토의내용, 국회의원실 주요의제 발표의 내용 등을 참고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2장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을 현실주의적 이론과 핵 억지력 등의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제3장은 북한의 핵개발 진행과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에 대해 짚어보며 앞으로의 북핵 외교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꾸준히 할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 전략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대응 전략 등을 알아보고, 각 대응전략들의 의미와 현실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향과 북한의 향후 핵개발 전망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앞장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2장에서는 현실주의 이론과 핵 억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가 나타난 배경과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핵문제 확산의 원인에 대해 1950년대 이후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적 질서를 원자적인 국가 간의 무정부 상태로 상정하며 민족국가를 국제정치구조의 기본단위로 설정한다. 또한 국가를 통일된 합리적 행동자로 파악하고, 분석하므로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 간의 대응과 반응을 비교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교체 되었지만 제3차 핵실험을 통해 변함없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핵 억지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억지력을 이해하려면 억지이론의 선행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1 절 현실주의 이론

평화는 인류가 염원하는 오랜 이상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안보와 평화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과 논란이 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달성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통한 방법이라고 역설하는 이들도 있다. 전자는 이상주의¹⁾자와 자유주의²⁾자들의 관점이고, 후자 현실주의자들이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 분석의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에 의해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변

1) 이춘근, (2007),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p.85. 이상주의(Idealism, Utopianism)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들 사이의 정치현상을 투쟁이 아닌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경쟁으로 보았다. 이상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거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국제정치에 있어서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2) 박재영, (2009), 『국제정치 패러다임』, p.124. 자유주의(Liberalism)는 현실주의와 비슷한 시기인 1940년대 초반에 이상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자의 이론적 관점은 현실속에서 세계 각국은 협력과 상호의존이 가능하다는 가정 속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하는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주의 이론도 계속 변화하고, 보강된 새로운 현실주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상주의의 반등으로 등장한 현실주의 이론은 1940부터 60년대 까지 전통적 현실주의(Traditional Realism)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에 신 현실주의(Neo Realism)가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다.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라고도 불리는 신 현실주의는 고유한 이익을 가진 국가들이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상호경쟁 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의 공통된 가정은 국가 중심성과 국가 간의 경쟁영역을 무정부 상태로 보는 것이다. 먼저 국가 중심성이란 국가를 국제정치의 중요한 단일의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개인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기구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용인하 제한된 자율권만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또 다른 가정은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보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란 국가 위의 조직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국가간의 이익이 상충되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있는 상부조직이 국제정치의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들은 서로의 힘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은 국내에서 최고의 권력이며, 국제적으로도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 권력을 가졌다든 국가간에 서로 경쟁하는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모든 국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력과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본다.

이제 현실주의 이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 현실주의 이론부터 공격적 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른 각각의 현실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북한의 핵보유의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전통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의 출발점은 모겐소(Hans J. Morgenthau)로 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1940년대 후반에 그의 “국제정치(Politics Among

Nations)"에서 현실주의 이론이 체계화 되었다. 모겐소는 기존의 이상주의가 법적·제도적 접근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집단의 안전보장과 사법적 해결 같은 국제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국가간의 평화의 관점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그는 전통적 현실주의를 주장하며 미국의 외교 쇄신을 요구하였다. 그는 민족국가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기 위해 다음의 여섯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정치현상은 인간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불변의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둘째 정치적 현실주의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중심은 국가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셋째, 권력은 국가이익을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가변적이다. 넷째, 정치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본다. 다섯째, 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보편적인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기타학파와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현실주의는 뚜렷한 차이 있다고 본다.

모겐소는 정치의 본질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타인을 위한 배려가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도 타인에 의해 유지하고 확대하며 과시하려는 욕구를 가진다고 본 것이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무한한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 나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권력의 투쟁은 인간 본성에서 파생되어 진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았다. 즉 정치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의지이며, 이 의지는 지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³⁾ 이런 이유로 그는 정치의 본질이 권력의 투쟁이라고 보았다.⁴⁾ 국제정치는 이러한 인간성에 바탕이 된 객관적 법칙에 기초를 두며 국가는 권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권력이라고 정의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

3) 전재성, (1999), “한스 모겐스의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 메타 이론적 검토와 실천의지 의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Vol.8 No.2, p.63. 재인용, 윤정희, (2013),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는가? : 현실주의시각”.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p.21

4) 박재영, 앞의 책, p.38 이러한 이유로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는 ‘인간성 현실주의(Human Nature Realism)’라고도 한다.

에 국가는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며, 국가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군사력이 사용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중심적 국가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모겐소에 의하면 국가는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힘의 추구는 국제 사회를 힘의 균형 상태로 만든다고 본다. 이러한 힘의 균형 상태를 일반적 사회원리라고 하였으며 국내정치와 국외정치에서 모두 적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모겐소의 주장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시기에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군비경쟁이 심화 되면서 국제정치학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즉 실제 외교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국가들간의 힘의 균형 추구와 힘을 이용한 상대국의 봉쇄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2. 신 현실주의

전통적 현실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현실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라고⁵⁾ 불리는 월츠의 현실주의적 관점은 문제의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근원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쟁의 원인을 이해해야만 평화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행동도 이와같은 이해 속에서 출발하며 국제체제를 이해하려면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군비를 증강하게 되면 해당 국가가 속해있는 국제체제의 구조적인 제약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국가는 단기간에 획득 할 수 있는 목표보다 장기적 생존을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행동해야하며 이때 다른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적으로 국가의 행위를 변경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 현실주의와는 달리 국제정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 힘(Power)에 의한 정치가 시작된다 는 것이다. 즉, 국가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최고 지도자 인간성이나 국가의 능력이 아닌 국제체제에서 구조적인 위치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월츠의 신 현실주의(Neorealism)는 국가중심의 현실주의와는 다르게 국제

5) 이춘근, 앞의 책, p.134

정치체제 배분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이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행동에 상호작용을 하여 결과를 만든다고 하였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경제와 같이 국제 정치도 구조에 따라 행위자인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설명하고 예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요소와 함께 시스템을 이룬다고 본다. 즉 구조란 전체로서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합을 이루는 배열원칙이자 시스템 안에서는 구성요소인 것이다.

국가들간에는 상대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내적으로 국가는 군비 증강과 대외적으로 힘의 배분구조에 참가를 한다. 또한 국제체제는 체제차원과 구조차원, 단위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서 국가의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구조차원에서 상대적 힘의 배분⁶⁾이라고 보고, 구조의 개념을 통해 국제정치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신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 있어 구조적으로 배분 되어있는 힘의 특성에 따라 국가간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국가가 힘이 강대해지면 그 국가에 대한 불신의 증가로 다른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강대국들은 현재의 세력균형 상태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⁷⁾

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은 생존과 안보의 극대화 관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현상유지에 만족을 하며 정복의 의지보다는 정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⁸⁾ 북한이 주변 국들에 비해 약소국이며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미국으로 부터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가보전과 유지를 하기 위해 핵 무장을 통한 국가 안보의 보장을 얻기위해 노력 할 것이며, 체제의 유지와 국가 안보가 가능해 질때까지 핵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가능할 때란 소형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

6) 이근육, (2011),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p.47

7) 설인효·이택선, (2012)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 방어적 현실주의 논쟁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단국대학교 분쟁 해결연구소, Vol.10 No.2, p.123

8) 황지환, (2007),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 현상유지 경행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 논총, Vol.47 No.3, p.14

게 하고, 탑재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일 때라고 생각된다.

윌츠는 소규모 핵전력을 가진 국가도 대규모 핵 전력을 보유한 상대국을 얹지 할 수 있으며,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안에서 국가는 자조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찾고자 노력 할 것이며 이것을 막기가 어렵다⁹⁾고 하였다.

3. 방어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지만 국제관계가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대국의 공세적 위협이 없다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현상 유지를 택한다는 것이다. 만일 현상타파를 위해 국력의 증강과 같은 행동을 하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다른 행동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안보에 있어 손해가 된다. 즉 국가의 안보증가가 오히려 주변국들을 자극해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증진을 위한 노력이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는 안보딜레마의 상황은 국가간에 의도와 상대적 권력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¹⁰⁾ 이 때문에 국가안보를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신중한 행동과 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방어적 현실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글레이저는 국가안보의 증진은 경쟁보다 협력이 더 나은 방책이라고 하였다. 자국의 안보를 증진이 주변국을 자극하는 안보딜레마의 상황으로 발생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격보다 방어가 대체로 유리하고, 저비용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현상유지 정책이 국가의 안보증강 노력에 비해 적절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타 국가에 대한 침공 보다 타 국가의 침략문제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추구 국가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실행해 탐욕의 목표가 없음을 주변국에게 알리고 자국의 군사력이 상대방에게 위협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의 안보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목표라고 하

9) 손용우, (2007),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국제정치논집, 제 52집 3호, p.260

10) 황지환. 앞의 논문, p.14

였다.

자국의 의도는 방어지만 상대국은 공격이라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상대국에게는 공격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과거 한국의 팀스피리트 훈련이나 지금의 키 리졸브, UFG 훈련에 대해 북한은 북침위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방어적 무기의 증가와 방어적 독트린¹¹⁾의 채택이 안보딜레마를 얹지시키며 군비경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어능력의 증가는 공격에 유리하지 않으며 억지를 통한 현상유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행위가 공격적으로 보일 때에도 실제 행동은 신중하며 현상유지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힘을 증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실험 원인을 분석하는 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할 중요한 요소이다.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가가 국력의 힘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상대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국력을 증진시키거나 현상유지를 통한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쌓인 북한은 자신의 상대적인 힘에 대한 분석과 주변국들 사이의 힘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중하게 행동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게되면 북한의 힘이 증대 될 것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거나 안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

4. 공격적 현실주의

공세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는 생존이고, 각 국가들은

11) 독트린(doctrine)은 원래 종교의 교리나 교의(教義)를 뜻하는 말이지만 정치의 무슨 주의, 학문의 무슨 신조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사에서 보면 독트린이 강대국 외교 노선의 기본 지침으로 대내외에 천명될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닉슨독트린, 부시독트린 등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외교정책들이 그것이다.

국제체제 내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의 의도에 대해 분명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두려워 한다고 본다. 결국 자조적인 무정부 체제 속에 각 국가들은 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의도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며 이는 이기적인 행동양식으로 나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어적인 대전제가 구체적 행동양식으로는 공세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공세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의 생존은 그 국가가 패권국이 됐을 때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¹²⁾ 무정부 체계 속에서 다른 국가들의 의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국가가 생존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유에서 공세적 현실주의는 군사력의 증강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공세적 현실주의는 한 국가가 경쟁국에 비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즉 전력보강에 들어가는 군사비 지출이나 외교적 비난감수, 상대국의 군사력 강화 등으로 인한 안보저하의 비용보다 국력 극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안보증진과 전력강화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군사력확충을 시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¹³⁾ 이러한 논리는 강대국 간의 경쟁은 필연적이며, 한반도 주변국에서의 군사력 경쟁도 필연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북한의 핵실험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력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전력보강을 위해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에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화와 협력에 제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것이다. 핵무기의 확보는 한국에 대한 군사력의 열세를 한번에 만회하고, 핵무기 발사체인 장거리 미사일의 조합을 통해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대

12) 문순보, (2010), “공세적 현실주의와 동북아 안보 : 미아시아의 설명력과 함의”,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p.348

13) 고봉준, (2008),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안일 양국 대응의 공격현실주의적 해석”, 한국정치학회, 학회보, Vol.42 No2, p.394

응능력을 과시하므로써 무력에 의한 적대행위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¹⁴⁾ 즉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는 막강하고 공격적인 국사력을 통해 신뢰 할 수 없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의 상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하여 합리적 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제 2 절 핵 억지 이론

1. 핵 억지 전략

억지(deterrence)¹⁵⁾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¹⁶⁾ 실제적인 억지는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나 용어자체는 핵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용되었다. 1953년 구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Dwigh tEisenhower)는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창안해 구 소련의 핵공격을 억지하였던 것이다. 만일 소련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엄청난 대응적 보복을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핵공격을 억지한다는 논리였다. 즉, 억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거나 공격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것이 많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킴으로써 달성된다고 보았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전자를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 또는 거부적 억지)라고 말하고, 후자를 “응징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 또는 응징적 억지)라고 말한다.¹⁷⁾ 이 중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는 공격하는자가 의도하는 바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태세를 구비하는 방법이므로 안전하지만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거부적인 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반격으로 공격하는 국가에

14) 윤정희, (2013), 앞의 논문, pp.32-33

15) 대부분 학자들은 억지(抑止)라고 용어를 사용하지만 박휘락은 능동적으로 제압하여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억제(抑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방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대에서도 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6) Glen H. Snyder, (1961),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pp. 14-16. 재인용, 박휘락, (2013),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국방연구, 56권 제1호, p.35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거부적 억지”(deterrence by denial)로 공격 자체가 성공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서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17) 박휘락, (2013), 『북핵 위협과 대응 : 국방전문가가 말하는 북한 핵무기의 오해와 진실』, 한국학술정보, pp.86~96

대해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는 응징에 의한 억지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통상적 전쟁의 억지에 비해 핵 억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어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 100kt의 경우 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다. 용산 상공 300m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49만명이 사망하고 48만명이 부상당할 것이고, 100kt급 핵무기를 3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180만 명이 사망하고 110만명이 부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고 한다. 이 결과를 보면 핵 전쟁 만큼은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억지시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임이 분명해진다.

핵 억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효과적인 핵무기 공격을 방어 할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항공기, 미사일, 포병 등의 투발수단을 통해 공격이 가능한데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사된 미사일이나 포탄을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은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방어체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였고,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round-based Interceptor)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배치 하였으며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ea-based Interceptor)을 탑재한 이지스(Aegis)함을 21척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체계로 SM-3 해상요격 미사일 61기, THAAD 지상 상층요격미사일 25기, PAC-3 지상 하층요격미사일 791기 등을 확보¹⁹⁾ 하였으나 그 성능이 완전히 입증된 상태가 아니다. 이같이 거부적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확실한 방법은 응징적 억지이다.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그런 능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며 상대방에게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핵무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상호확증적 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²⁰⁾에서 보듯 냉전시기 미국이 소련의 핵공격을 억지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응징적 억지개념 이

18) 김태우, (2010), “북한 핵개발과 확대억제 강화 필요성”,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p.319

19) 조선일보, 2010년 5월 19일

20)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을 집중적으로 증강하여 상대방의 1격에 서도 생존하여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상호 확증적 파괴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었으며 이 논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와 한국 등은 미국의 응징력에 의존하는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이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²¹⁾에 의해 응징적 억지를 구현하고 있다.

2. 예방적 자위권

핵위협에 대하여 선제행동과 관련해 검토 요구되는 것은 예방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의 개념이다. 예방적 자위권보다 더 일반적인 사항이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인데, 이것은 타국으로부터 급박 또는 협존하는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 공격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높은 국가가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하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또 UN헌장 제51조에 “이 헌장의 어떤 규정도, UN 회원국에 대해 무력으로 공격 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때까지 개별적, 집단적인 자위권적 행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 자국에 대한 자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자위권 중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논리가 바로 예방적 자위권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고성능, 고도의 명중률, 고도의 파괴력, 장거리 공격 등을 갖춘 신무기가 발달함에 따라 자위권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로만 한정한다면 선제 공격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 인식에서²²⁾ 출발된 예방적 자위권은 1962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절박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통상적 예방적 자위권이 인정되기가 어렵지만, 서구의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UN헌장 제51조 “무력공격”的 범위는 급박한 상황의 “무력의 위협”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 사전적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UN헌장과 상관없이 관습적인 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선제적 자위권”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고²³⁾ 적국의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는 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공격의 징후가 확실할 경우 예방적 자위권이 행사 되어야 할 필

21) 확장억지는 우방국이 공격당해도 미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인식하여 미국이 대응해 준다는 약속이다. 확장억지는 핵과 비핵공격 모두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핵우산은 핵무기 공격에 국한한 확장억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용어이다.

22) 김현수, (2004),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23호, p.258

23) 김찬규, (2009), “무력공격의 개념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인도법논총, 29호 p.7

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아랍국가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예방적 자위권 개념을 빈번하게 적용시켜 상대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였다. 예들 들어 1967년 이집트의 공격이 임박하자 보이자 이스라엘은 6월 5일 새벽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비행장에 집결한 아랍 공군기들에 대해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라크가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완성하게 되면 결국 핵폭탄을 제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여 1981년 6월 7일 건설 초기단계에 불과하던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였으며, 동일 논리로 2007년 9월 시리아에 건설 중인 다일 아주르(Dair Alzour) 원자로 시설을 전투기로 파괴하였다. 국제사회가 특정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예방적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임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결정적인 제재를 결의하지는 않을 정도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다.²⁴⁾ 결론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타당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제행동이 불가피한 상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방적 자위권은 특정 국가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판단하여 행동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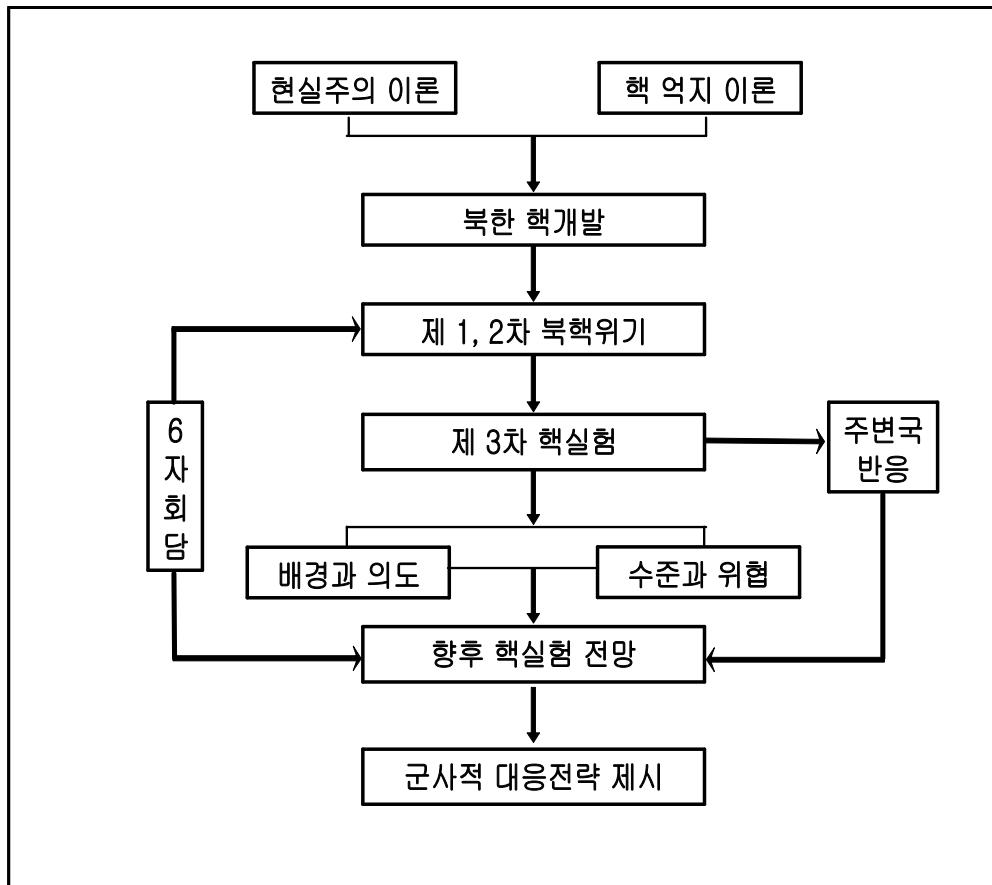
제 3 절 연구의 분석 틀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틀을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본 흐름은 북한의 핵개발을 하게 된 배경을 현실주의 이론과 핵 억지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핵개발을 하므로써 과정에서 제 1,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에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므로써 6자회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나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전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3차 핵실험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분석, 수준과 위협분석을 살펴보고, 주변국의 반응 등을 통해 향후 핵실험의 전망을 유추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24) 최태현, (1993),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국민대 법학연구소. 제6호, 제110-122
인용, 박희락, (2012), “북한 핵무기 무력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안”. 북핵과 통일안보 국제 세미나.

은 핵을 포기하는 일은 김정은 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따라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북한의 핵위협의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전략 중 군사적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제 3 장 북한의 핵개발 진행과 주변국 반응분석

제 1 절 북한의 핵개발 진행분석

1. 핵개발 과정과 위협

1) 핵 개발 대두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원자력 연구목적으로 자원 탐사를 실시하였는데 탐사중 산화 우라늄이 4~5% 정도 포함된 광물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²⁵⁾ 해방 후 구 소련이 우라늄에 관심을 갖고 북한과 공동탐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은 우라늄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연구목적으로 구 소련의 핵 연구소인 드루나 연구소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편 6. 25 전쟁 중 미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자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에서 원폭사용 고려 입장을 밝혔고, 이에 김일성은 미국이 핵을 사용하면 자신들은 끝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²⁶⁾

6. 25 전쟁 후 북한은 1955년 4월부터 ‘원자 및 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해 핵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56년 3월 소련은 ‘조소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였다. 이후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핵개발 연구 인력양성과 핵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평안북도 영변과 태천에 대규모 핵연구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2년 평안북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1967년에는 소련에서 도입한 2MW급 원자로 가동에 들어갔다. 북한의 핵개발은 과정 중 1950~60년대까지는 핵개발 기술을 위한 인력의 양성과 우라늄 대한 정보획득 등 기초를 배양하는 시기였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흑연감속로 개발에 힘을 쏟았고, 1975년 최초의 플루토늄 축출에 성공하였으며 1978년에는 북한 전역에 우라늄 탐사를 실시하여 약 2,600만 톤의 우라늄 매장량을 확인하였다. 1980년에는 평안북도 연변에 5MW급 원자로를 착공하는 등 독자적 핵개발을 위한 자립기반을 확립하였다.

한편 1970년대말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으로 시작된 경제발전으로 총 국방비 누계에서 한국이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계기로 시작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 핵 보유 추진은 오히려 북한 김일성

25) 김종선, (2013), “북한 핵기술 어디까지 왔나”, 북한연구소, No.496, p.78

26) 윤정희, 앞의 논문, p.41

정권이 핵무장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북의 군비격차가 더욱 커졌으며 1980년대 말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소련의 해체 등으로 냉전체제는 붕괴되어 북한은 체제의 위협과 위기위식이 더욱 증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1986년부터 평안북도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가동으로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 1992년의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북한의 국제정치체제 고립을 가중 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북한은 들통한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붕괴와 적국과의 수교라는 냉전이후의 새로운 국제체계 변화로 인해 국가안보의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로 인한 세력 불균형은 북한이 체제의 보존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 제 1 차 북핵 위기

제 1차 북한 핵 위기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²⁷⁾을 탈퇴를 선언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NPT는 핵확산 금지 원칙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조약의 가입 18개월 이내에 반드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²⁸⁾의 안전 담보협정체결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소련의 종용으로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 했으나, 안전담보협정 서명을 미루다가 1992년 1월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IAEA의 규정에 따라 북한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1990년 핵 활동을 통해 90g의 플루토늄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IAEA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북한이 최소 세 차례 핵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북한의 과거 핵 활동 의혹을 IAEA가 조사하기 위해 미신고 핵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완강히 거절하였고 결국 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27) 1968년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70년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75년 4월에, 북한은 1985년 12월 가입하여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다.

28) 1957년 7월에 설립된 NPT검증기구이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과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제1차 핵위기가 시작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강경한 입장만을 보인 것이 아니라 미국 및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한반도의 세력균형 붕괴와 정권 생존위협으로 핵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입지를 수호하기 위해 소위 '벼랑끝 정책'²⁹⁾ 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하는 모험주의적 외교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남북회담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빌언이나 평안북도 영변의 핵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당시 북한에서는 지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³⁰⁾

북한의 '벼랑 끝 정책'은 미국과의 긴장을 확대하고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1994년 5월에 북한이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분리하자 곧바로 미국은 제안했던 고위급 회담을 철회하고, UN 제재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주요 대북제재의 내용은 아래<표 1> 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구분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채택 일자	2005. 10. 14	2009. 6. 12	2013. 1. 22	2013. 3. 8
채택 계기	1차핵실험 (2006. 10. 9)	2차핵실험 (2009. 5. 25)	장거리로켓발사 (2012. 12. 12)	3차핵실험 (2013. 2. 12)
주요 내용	북한규탄대북제재 이행과 제재 위원회 구성결정	북한 '가장 강력하게 규탄' 강경제재	결의안을 어기면 중대조치조항 추가	회원국 결의 이행 강제화된 스마트제재
화물 검색	북한관련 화물검색 협조요구	의심화물 검색촉구	공해상에서도 의심선박 검색	의심선박, 항공기 검색 의무화
무기 검수	대량살상무기에 국한해 수출금지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확대	군사전용 가능성 있는 모든 물품 수입통제	우라늄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에 사용 품목8개 추가
금융 제재	핵, WMD프로그램 지원자금 제재	무기확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지원 금지	'현금다발' 이용한 금융제재 회피 수법환기	북한 내 은행지점, 계좌개설 금지촉구

* 출처 : 서울신문 2013년 3월 9일자

29)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취한 극단적 방법의 협상전술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에서 유래한 말이다. 일명 공갈(협박)전술이라고 불리며 북한은 이를 '맞받아치기 전술'이라고 부른다. 즉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막다른 상황까지 몰고 가는 초강수를 띠워 위기에서 탈출하는 특유의 협상전술을 지칭한다.

30) 황장엽, (2001), 『어둠의 편이 된 헷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사, p.218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논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기는 했지만 당시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 저지의사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UN 제재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북한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은 미국의 군사 공격설이었다. 미국은 UN을 통한 제재와 함께 군사적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공습을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미군 증강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유사 시 미국은 한국 내에서 미국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의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북침을 위한 준비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었다. 먼저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 반격을 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권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었다. 만일 미국의 공격에 대해 반격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대미 강경노선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대내외적 북한 정권의 입지는 약화되어 체제 붕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북한에게는 재앙이었으며 체제생존을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미국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결국 1994년 5~6월을 기점으로 위기 상황을 재해석하고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전과 달리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반복하였으며 새로운 평화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6월에는 북미 회담의 당사자인 강석주를 통해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제시 하기도 했다. 김일성 역시 북한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 국제정책센터 연구소장이나 지미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제안을 반복했으며 미국의 관리들은 당시 북한의 제안이 이전과 달리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북한의 지도부는 체면 치례를 하면서도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당시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매우 걱정하였으며 카터의 방북을 매우 환영했다고 한다.³¹⁾ 당시 북한 정책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김일성과 카터

의 합의 이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고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카터조차도 미국의 새로운 제시조건이 이전에 논의되지도 않았고, 합의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반발할 정도 였으며, 북한도 이전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항이었다. 특히 북미 회담의 당사자인 강석주가 카터와의 회담에서 매우 강경하게 거부했던 점을 볼 때, 새로운 조건에 대한 북한의 무조건적 수용은 클린턴 행정부에게도 의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북한은 위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며 미국과 군사적 충돌, 북한정권의 붕괴라는 죄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보여준 당시 북한의 정책 전환을 잘 설명해준다. 결국 김일성-카터 합의는 10월의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고, 이후 북한의 위협인식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핵 정책도 합의에 의거하여 유화 정책의 기조가 지속되었다.³²⁾ 북한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여러번 약속했으며 IAEA에 의한면 북한이 실제로 합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물론 북한이 합의를 100% 이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결시켰던 핵 프로그램을 2002년 제2차 핵 위기가 대두될 때까지 재가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3) 제 2 차 북핵 위기

북한의 대외인식은 2001년 1월 집권한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과거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대북 강경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핵 태세 보고서와 미국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구체화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와 다른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에 대해 북한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변화된 미국의 대북인식의 변화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북한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이전의 클린턴 행정부가 다져 놓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합의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핵태세 보고서에 대해서는 양자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해 핵 공격도 감행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결국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신뢰가 추락하며 2002년 10월 무너지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

31) 위의 책, pp.286~287

32) 황지환, 앞의 논문, p.92

바 합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제네바 합의에서 유일하게 이행했던 사항을 폐기하였다며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제네바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에 착수하는 등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충돌정책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IAEA의 봉인과 감시 장치를 제거하고 연료봉을 교체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IAEA의 사찰단마저 추방하였고, 다음해 1월 10일 NPT에서의 즉각적인 탈퇴를 선언하였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이로 인해 위협인식의 증가에 따라 의도적으로 위기 고조를 시작한 것이다. 제네바 합의의 파기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북한에게는 분명 체제의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에따라 자신들의 입지와 의지를 지키려는 모험적인 핵 정책을 또 다시 추구하게 되었다.

2002년에 시작된 제 2차 핵 위기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은 점점 커졌으며 특히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선제공격으로 침공한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매우 민감히 반응해 왔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은 이라크의 상황을 자신들의 상황과 대비시키면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라크 전쟁이 북한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 정권교체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면 북한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었다. 당시 북한의 위협인식과 충돌정책은 2003년 8월 이후에 개최된 6자회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4년 6월까지 세 차례 6자회담에서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상반된 의식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중지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원칙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 물론 6자회담을 통해 일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두 나라간의 입장차이는 끝내 해소되지 못하고 경색국면으로 돌아가곤 했하였다. 2005년 9월 19일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또 갈등이 시작

되었으며 이후의 회담이 결렬되었던 것은 핵문제와 관련된 두나라의 좁혀지지 않는 인식의 차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부시 1기와 2기의 대북정책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 즉 북한의 대미 인식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6자회담의 진행과 한계

1) 6자회담의 진행

한국은 정부는 제2차 북핵 위기 와중에 6자회담의 한 당사자로서 북미 간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북한 핵 문제 타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에만 사로잡혀 북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³³⁾ 이러한 문제는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드러났다. 6자회담이야말로 평화와 위기의 두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회담의 타결을 이끌어 낸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외교승리라고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강조했다. 하지만 ‘말 대 말’의 합의는 결국 ‘행동 대 행동’의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2월 13일 9.19공동성명 이행 초기조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1년 반 가까이 북핵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 이후 10.3합의가 이루어졌지만,³⁴⁾ 한국 정부를 비롯 국내외의 낙관론과는 달리 반복되는 합의와 갈등은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또 다시 보여주었다. 2.13합의, 10.3합의에도 불구하고 9.19베이징 공동성명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행되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와 공동성명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한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였다. 즉, CVID로 요약되는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신고하고 폐기하게 되면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실질적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서 9.19공동성명의 첫 항인 북한이 핵포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둘째 항인 북 미 간의 외교관계 개선이 가능하고, 셋째 항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넷째 항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33) 황지환, 앞의 논문, p.103

34) 외교통상부,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 2단계 조치” 2007년 10월 3일

구축이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을 통해 북 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신뢰가 조성되어지고, 대북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핵무기 포기를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 미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핵 위기가 북한 스스로가 야기한 문제라기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 핵 문제의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의 핵무기 반입과 대북 핵위협에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제거할 때 비로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핵협상과 합의문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북핵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동시 이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 대 말'의 합의 이후에도 이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그 합의는 결국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7년 2월, 10월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2단계 조치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핵폐기의 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놓여있었다. 2.13 합의 초기조치의 이행이 예정된 기한인 60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이행되었고, 2단계 핵물질 신고목록의 제출도 예정된 기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논란이 되었던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핵개발의 포기는 북한이 전략적인 선택의 변화가 없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반면 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전념하며 세계질서의 변화를 시도하는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 보유나 핵 확산가능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핵동결, 핵신고, 핵폐기로 이뤄지는 3단계의 로드맵은 2008년에 핵신고의 2단계까지 도달했지만 북핵 폐기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지는 3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

2) 6자회담의 한계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인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협상은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

한이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6자회담의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의 핵 문제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를 한반도로 가지고 온 냉전기의 미국 핵정책과 대북 적대 시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자신들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위협하고 있고, 자신들은 정치를 통해 강성대국을 이룩하여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 할 것이라고 절대 주장하지 않는데 그 논리는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이 제거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제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핵무기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적대 시정책과 핵위협이 한반도 내에서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자신들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핵보유만이 자신들의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 인식하는 것이며 핵 문제를 먼저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미국과 외교관계의 정상화 없이 살 수는 있지만 핵 억지력 없이 살 수는 없다는 북한정권의 언급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와같이 다양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미국의 대외전략을 고려시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신뢰가 조성된 후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 핵 프로그램과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6자회담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인데 자신들의 비핵화만을 강요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통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라며 미국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의 문서에 합의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6자회담이 참가국들 간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문의 내용을 모호하게 기술한 데서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6자회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요인은 북한 정권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 스스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2006년, 2009년의 제1, 2차 핵실험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 핵심적인 이슈는 미국 대 북한의 핵무기라는 보유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를 떠나 스스로 이제 자신들은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국이 핵위협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해준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전과의 자세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것은 북 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 되더라도 더 이상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핵 군축 협상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며, 핵군축 협상이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 핵 문제를 핵 보유국 간의 평등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현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세계 비확산 정책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북핵문제는 더욱 커다란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제 2 절 제 3 차 핵실험과 주변국 반응분석

1. 제 3 차 핵실험 배경과 의도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하여 2013년 1월 23일 UN 안보리의 제재 이후 북한은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제3차 핵실험을 예고하였다. 과거 제1, 2차 북한 핵실험도 모두 사전에 예고 되었고, 그전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3차 핵실험 전에도 예외없이 미사일 발사가 실행되었으며 곧이어 핵실험을 예고하였다. 북한은 2월 12일일에 최종 실험일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일과 북한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김정일 생일 직전에 실시하므로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과 의도를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내적 요인으로 첫째, 김정일 유훈의 관철 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죽기 전에 장문의 유훈을 남겼다. 그 중 핵문제와 관련 김정일은 “핵과 장거리미사일,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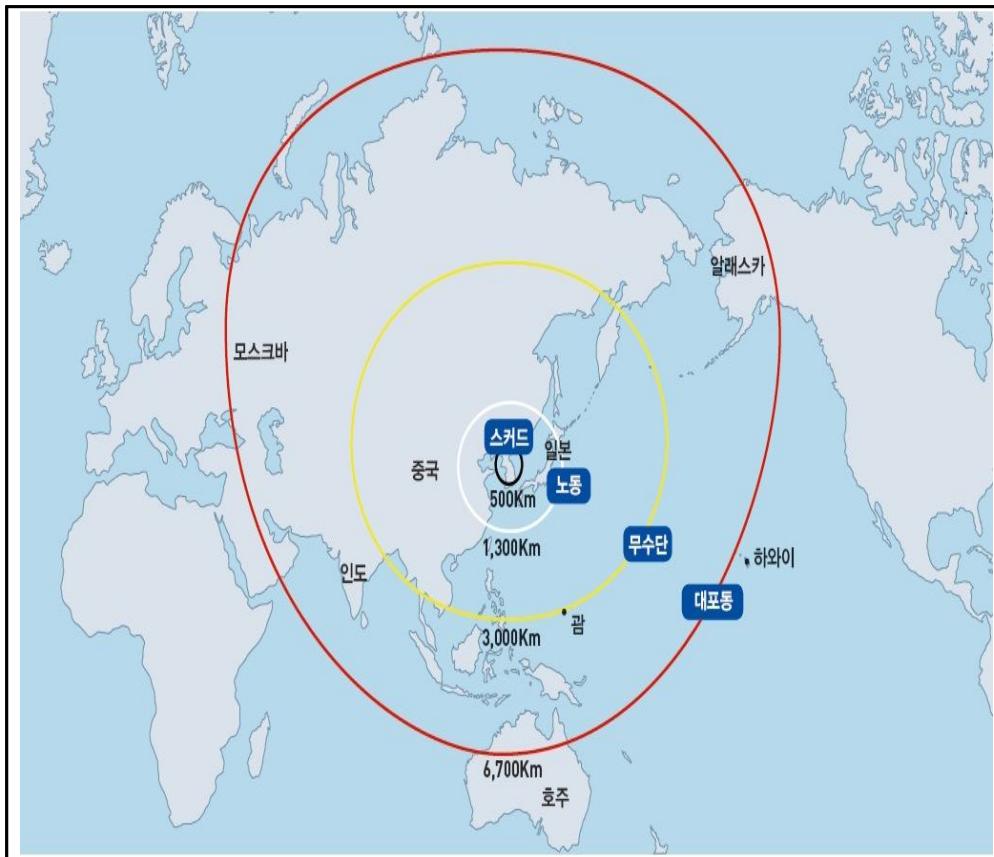
화학무기는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는 것이야 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각 미사일 별 사거리를 지도에서 표시 하였으며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성능을 미사일의 사거리와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선대수령의 지명에 의해 후계자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북한의 정치문화는 선대의 정치노선을 그대로 답습 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그것을 어기면 정치적인 정당성이 소멸되거나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김정은도 역시 김정일의 노선과 유훈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은 위대한 지도자인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업적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고,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실시하였던 것으로 볼 때 김정일의 치적에 빗대어 기반이 약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과 성능

구분	내 용
기술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OG-5, 7 (67년), 중국과 DF-61 공동개발 착수(76년)
스커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로부터 구 소련제 스커드-B와 MAZ-543도입(81년)
스커드-B(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제 스커드-B복제, 사거리 280~300km, 탄두 1,000kg • 초도생산시작(85년)
스커드-B(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거리 320~340km, 탄두 1,000kg • 양산(87년)
스커드-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거리 500km, 탄두 700~800kg 스커드-C 양산체재 돌입(91년)
노동 미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거리 1,000~1,300km, 탄두 800~1,000kg • 시험발사(93년)
대포동 1호,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포동 1호 시험발사(98년) • 신형장거리 미사일(사거리:3,000~4,000km) 개발완료(02년) • 고체추진 KN-02 시험발사(04~07년) • 대포동 2호 / 개량형 시험발사(06년, 09년))
대포동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 로켓 / 대포동 3호 시험발사 실패('12.4월) • 3단 로켓 / 대포동 3호(10,000km) 발사 성공('12.12월)

* 출처 : 권용수, (2013)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평가”, 안보현안분석 Vol.80,2월호, p.5

<그림 2>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 출처 : 2012 국방백서, 국방부, p.30

둘째, 미국과의 대결구조 하에서 긴장을 고조 시키는 군사적 위협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항상 정세를 비관적이고 최악으로 상정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즉 주변의 강대국과 남한에 의해 둘러 쌓여 있어 혼신을 다해 그 포위망을 돌파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최후 보루가 핵무기의 보유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핵능력의 제고 필요성이다. 제1, 2차 핵실험은 북한이 플루토늄 핵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 했다고 보여지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핵무기 보유국 임을 스스로 발표하였다. 또한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4월 13일에 북한은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로켓 발사라는 명목

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 운반수단 보유를 과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24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성이나 장거리로켓 발사가 미국을 직접 겨냥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 할 만큼의 소형화를 이루었느냐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북한은 핵탄두의 무게를 1Ton 미만으로 경량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단순한 경량화 뿐만 아니라 다탄두 실험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넷째, 북한 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통합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과 반복되는 경제와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 상태이므로 본인의 체계 기반을 잡는 것과 병행 하여 북한 주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외부로 부터의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최선의 것은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와 결속과 통합을 시도 하는 것이다. 핵 무기 보유국 선언,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에 이어서 핵무기 소형화 실험까지 성공하면 북한주민들의 국가와 정권에 대한 충성이 높아질 것이고, 굶주림에서의 고통은 잠시나마 없어질 것이다. 한편 북한은 UN 안보리 제재 이후인 1월 26일부터 노동신문, 평양방송 등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선군사상’을 강조하면서 ‘애국성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자원입대를 유도하여 주민의 결속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제재로 경제난 극복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속되는 북한 경제난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 돌리고 있다. 결국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의 수단으로, 외부의 제재는 주민결속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³⁵⁾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먼저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스스로 ‘사실상의(de-facto)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고 한 측면이다. 2006년과 2009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는 표준형 핵무기 위력(20KT)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

35) 전현준, (2013),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협 배경 분석”, Online Series CO 13-05 : 통일연구원, pp.2~3

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북한은 다시 대외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물리적인 위력 과시밖에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서는 기존보다 위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예견을 해왔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기존 협상 체제를 깨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의 전환을 하려는 의도적 측면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과의 2. 29 합의를 파기하였고, 이후 4월 13일 헌법의 개정을 통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헌법 전문에 공식적으로 명기하였다. 또한 7월 20일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8월 31일 외무성 비망록에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의 핵 억지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등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비핵화 회담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자신들에게만 강요하는 비핵화의 기준 틀을 깨고 6자회담을 핵보유국 간 군축회담이나 평화협정회담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소위 "새 판 짜기"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상 의제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체제로의 전환,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 문제 등을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때문에 한·미정부의 기존 '제재와 대화 병행전략'을 전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3차 핵실험 카드로 오바마 1기 행정부와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알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이 수립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 했을 것이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³⁶⁾

2. 제 3 차 핵실험 수준과 위협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전과 달리

36) 함형필, (2013),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능력 평가 : 사실상의 핵보유국인가?", 국방연구원, 5p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 하였고,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지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 으로 과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3차 핵시험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이며, “우리의 핵 억지력은 이미 부터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를 정밀 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을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정확히 투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위와같은 핵능력을 구비 하였고,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상의 핵보유국 (de-facto nuclear weapons state)’ 기준에 얼마만큼 근접 했는지를 분석하여 그 수준과 위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핵실험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실험 폭발위력이다. 다음은 핵무기의 소형화 · 경량화(miniaturization)의 여부이다. 이것은 핵무기의 설계기술과 개발과정이 진행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표 3> 진도별 핵폭발의 위력 추정치³⁷⁾

진도 / 위력산출방식	KIGAM	CTBTO	Murphy(미)	Ringdal(러)
4.9Mb (한국지질연구원)	5.5kt	7.94kt	16.21kt	3.98kt
5.1MB (미국지질조사국)	9.5kt	12.59kt	28.63kt	7.36kt

* 출처 : 전성훈, (2013), “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책:분석과 전망” Online Series CO.13-08. 통일연구원, p.1

마지막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Warheads-grade highly enricheduranium, HEU) 사용 여부다. 만일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HEU를 사용했다면, 북한이 비밀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무기화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HEU를 생산했다고 보이며, 나아가 HEU 핵무기 설계기술도 확보하여 핵무기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제3차 핵실험을 살펴보겠다.

37) Mb : 인공지진의 실제파 규모(Body wave magmitude), KIGAM:한국지질연구원 방식, CTBTO: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방식, Murphy(미):미국의 Murphy 경험식, Ringdal(러):러시아의 Ringdal 경험식

일반적인 핵실험에서 나타나는 핵무기 폭발위력은 인공지진에서 나타나는 실체파 규모(mb)2를 TNT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산출한다. 금번 3차 핵실험의 지진파 규모는 각 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약 4.9 ~ 5.2로 평가가 되고 있다. 탐지된 지진파 에너지 규모로 판단 때, 3차 핵실험 위력이 2차 핵실험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폭발 위력의 측면에서 기존 핵개발국의 초기단계 핵실험 수준에 도달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 설계를 완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말한대로 소형화·경량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북한이 2, 3차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성공했으며, 80년대말 부터 100여 차례 이상의 고풍 실험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파키스탄과 이란 등의 나라와 비밀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의 설계정보를 입수 하였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추가로 컴퓨터 모의실험이나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대부분 기존 핵보유국은 최초 핵실험한 이후 약 2~7년 이내에 소형화를 달성 했다는 전례등도 감안해야 한다. 핵무기 소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운반 수단을 대상으로 하여 소형화를 달성했느냐이다. 가장 유력한 운반수단은 노동미사일로서 탑재중량은 약 700kg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핵탄두 탑재를 위한 탄두의 중량은 약 500kg정도에 불과하다. 국제과학안보연구소(ISIS) 올브라이트 소장은 2. 13 북한동향 분석 웹사이트인 ‘38North’에 게재된 글에서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노동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대 초·중반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달성이 여부가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는 없다. 이유는 미사일의 사거리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면서 탄두중량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HEU 핵무기의 사용 여부다. 핵실험 시 방출되는 방사성 제논이라는 물질을 탐지하지 못하여 사실상 HEU 사용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다. 다만 북한의 발 표를 통해 추정할 뿐이다. 또한 북한은 “다종화”라는 표현을 통하여 HEU 사용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했지만, 다종화의 의미는 여러가지로 생각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즉 다종화라는 표현은 핵물질(Pu, HEU)이나 탄두형태(미사일 종류), 기폭방식(내폭형, 포신형)과 무기방식(핵분열·증폭형·융합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이다. HEU가 아님에도 전략적인 모호성 차원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3차 핵실험은 HEU 내폭형 핵무기를 사용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은 현재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으로 이들 국가들은 NPT 조약에 의거하여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거나 핵 폭발장치를 개발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획득은 가능 할 것이나, 이것도 NPT 체제 내에서는 불법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였고, 자의적으로 NPT를 탈퇴한 국가로서는 획득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와 별개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단순히 핵무기 몇 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를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신뢰성 있는 핵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핵억지력(a nuclear deterrent force)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존력(survivability), 운반체계(delivery system), 핵무기 자체의 안전성(safety), 핵무기 방호(security)체계, 승인되지 않은 사용(unauthorized use)의 위험성 방지 체계, 지휘통제시스템(continuity of command and control), 핵사용 독트린(targeting and doctrine), 충분한 핵무기 위력과 수량, 그리고 합리적 수준의 운영비용 등 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³⁸⁾

북한의 억지력 수준을 평가할때,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적국이 있는 특수한 입장임을 감안해야한다. 북한은 자위적 핵억지력 구축의 명분과 미국의 핵위협, 대북 적대시정책을 핵 보유의 이유로 거론 하였으므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갖추었을 때야 비로소 신뢰성이 있는 핵 억지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신뢰성 있는 핵 억지력을 지닌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개념에 맞는 억지력으로 ’최소억지(minimum deterrence)’ 수준의 핵전력을 이뤄야 한다. 최소억지 수준이란 유사시에 상대국의 핵 선제공격으로부터

38) 박종철, (2013),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반도 평화정착포럼, pp.34~35

살아남아 상대국에 대해 대도시나 산업시설의 등의 주요 시설을 상당 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제2격(second strike)의 능력을 구비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적과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50~100기 정도의 안전성·방호·지휘통제체계가 확립된 핵전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제 가까스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특정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초기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핵개발의 과정에서 볼 때, 아직도 이를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본격적인 핵무기의 양산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력적인 핵무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전력화 해야하며, 나아가 핵전력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실전배치를 위해 핵무기 투발부대를 지정하고, 핵사용 독트린도 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한국을 대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선제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핵전력이 생존할 것이며, 살아남은 핵 미사일 전력으로 남한에 대해 제2격하여 무력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핵무기와 위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와 실전배치는 현 시점에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 수 있으며 아마도 북한은 향후 2~3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작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3. 주변국 반응분석

1) 미국의 반응

미국의 핵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2010년 4월에 발간된 NPR(핵태세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러 간 ‘뉴 스타트(New START)’를 앞에 두고 발간된 위 자료는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구체화 되어 나타나 있다.⁴⁰⁾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의 포기를 선언하면서도,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에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즉, 비확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핵문제를 일으키는 대상국가인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39) 박휘락, 앞의 논문, p.32

40) <http://www.defense.gov/npr/docs/2010%20Nuclear%20Posture%20Review%20Report.pdf> (검색일 2013. 8. 20)

이해된다. 미국 행정부 자문 기구인 <글로벌 제로> 산하의 미 핵정책위원회가 2002년 5월 내놓은 보고서⁴¹⁾에는 미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 80% 삭감과 핵탄두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전량 폐기를 촉구하였다.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제임스 카트赖特(James Cartwright) 전 미국 합참차장은 배치되어 있는 전략 핵무기를 450기로 제한시키고 450기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즉 전체보유 핵무기를 약 1,000기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을 대해 주장하고 있다.

핵 감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2013년 2월 12일에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의 감축계획과 국제적 비확산 체제 강화를 거듭 언급했는데, 이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개인과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⁴²⁾ 핵정책과 관련한 연설에서 핵심 내용은 ‘미국의 자발적 핵감축 노력’과 ‘비 보유국들에 대한 핵 확산 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즉 이란과 북한에 핵개발에 대한 경고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10년 러시아와의 전략적 핵무기 감축협정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2018년까지 전략핵 보유를 1,550개까지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서 더 나아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1,000개까지 줄 일 수 있다는 입장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감행되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분야인 핵문제 위기를 고조시켜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협상의 성과를 거두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세계 핵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NPT 체제가 무력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일부 인사들을 포함한 보수성향의 정치 인사들은 오바마 정부의 글로벌 비핵화 정책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게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고, 동맹관계의 균열과 세계안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41) <http://www.globalzero.org/get-the-facts/us-nuclear-strategy> (검색일 2013. 8. 20), 글로벌 제로는 핵정책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다양한 조언을 해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42) <http://www.whitehouse.gov/state-of-the-union-2013> (검색일 2013. 8. 20)

43) Pifer, Steven and Michael O'Hanlon. (2012). “The Opportunity: Next Steps in Reducing Nuclear Arms.” Washington,

핵무기를 1,000개로 줄이더라도 미국이 핵무기 부족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향후 20년 동안 1,200억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추진하는 비핵화 노력이 세계의 군축·비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부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아니면 20년의 탈냉전기 동안 북·미관계를 통해 핵보유라는 목표가 구체화 되었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을 포기할지의 여부도 현재의 정보와 데이터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경색은 북·중간 경제통합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이 한국이나 국제사회와 도움없이 스스로 생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키워 줄 있다. 나아가 남·북한 사이의 이질감이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통일비용만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비확산 체제 강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란과 북한문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북한이 내세우는 위기고조 전략 등으로 볼때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성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2012년 4월 북한이 핵 보유에 대한 헌법 명문화에 이어서 제3차 핵실험에 이르기 까지 북한이 시도한 일련의 과정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여기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은 결국 ‘탈냉전적 분단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우리의 노력보다는 ‘미·중남한’ 등 남북간의 차원이 아니라 탈 한반도적 차원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질 것이다. 2013년 초에 전개된 북한의 공세국면 강화를 보면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유화정책을 희망한다는 분석과는 달리,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상시 위기국면을 조성하는 것일 수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재인용, 박인희, (2013),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보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제 27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p.10

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배경에는 이러한 상시적인 위기국면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시 위기고조 전략이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 유화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유인책으로도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변화를 추구 한다면 박인희 교수는 그 과정을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른 북한의 대응행태 분석을 통해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북·미 대화시도나 6자회담, 다자간 회담등으로 진행되며 적극적인 대북담판 시도 등의 순으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⁴⁴⁾

미국은 한미공조의 틀을 깨어 뜨리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디자주의나 양자주의를 결합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미간 위기의 수위가 높다는 것은 그 이후 협상과 유화국면의 가능성도 역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외교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위기의 국면이 위태로우면 위태로울수록 앞으로의 협상국면 역시 높은 수준에서 전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켈리 신임 국무장관의 외교전략과 북핵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증가, 중국의 북한 편들기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북·미간 대화 국면이 시작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찾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인 선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2) 중국의 반응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 북한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2년 10월의 제2차 북핵 위기가 나타났고, 같은 해 11월 제16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후진타오(胡錦濤)에게 있어 북핵문제는 집권하는 기간 내내 그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외교사안 중 하나였다.⁴⁵⁾ 후진타오는 집권 초기 북한에 대하여 당 대 당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정상 국가관계’를 강조해 왔지만 북한의 거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진타오 집권기간 동안

44) 박인희, 위의 논문, p.12

45) 박병광, (2010),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pp.57~58.

북한은 계속된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함으로써 중국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후진타오 집권기간에 이뤄진 북한의 제1,2차 핵실험은 중국을 직접적인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2006년 10월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대북제재의 내용을 담은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통과에 가세하였다.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압적 조치에 편승한 첫 사례였으며, 이어서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때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에 중국에서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중국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불량배 국가’ 등의 모욕적 표현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내에서의 이러한 반응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중 협력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판단과 그에 기초한 국가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회성 사건에 의하여 쉽게 변질되거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판단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으로 간주하고 있다.⁴⁶⁾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과의 대립과 충돌에 대한 중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역할을 한다고 본다.⁴⁷⁾ 과거 명(明)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에 개입한 것, 청(淸)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놓고 벌인 일본과의 ‘청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 역시 북한이 지닌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중국에 있어 북한이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전통적 가치는 변함이 없으며 이것은 한반도의 고유한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한을 미국 등 서구 세력과의 경쟁속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전

46) 최근에는 ‘전략적 함정(strategic trap)’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함정(trap)에 빠져서 이어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손상의 부담만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上海國際問題研究院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내용 (上海, 2012. 6. 21).

47) Shen Dingli. (2006)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pp.19~20. 재인용, 김재철, (2013),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제 27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p.26

략적 카드(strategic card)' 또는 '전략적 지렛대(strategic leverage)'의 역할로 판단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패권경쟁 다툼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미 양국은 서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 및 특수한 관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종의 '카드'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협상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고, 특수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 이른바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대응을 위한 '대항전선의 일원'으로 북한의 존재를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과거 중국, 소련, 북한 등이 유지했던 '북방 3각'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남방 3각'은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등을 이유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군사력의 증가는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강화 등의 우려 및 반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⁴⁸⁾ 이 때문에 중국은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중동맹을 폐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북한도 역시 과거에 비해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자체의 폐쇄성이나 경제난심화는 북한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중국정부는 북한의 '불안정사태(contingency)'에 발생에 따른 대비를 논의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 등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공식적인 언급은 최대한 삼가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의 '전통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안정에 유리한 것으로 본다.⁴⁹⁾ 즉, 북한의 핵개발과

48) 박병광, (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p.18

49)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 시 북중 양국 지도부는 이른바 '5개 협력방안'에 합의했으며, 그중 하나로서 "내정 및

군사적인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고위층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원조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인식과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나 압박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시진핑(習近平)은 2012년 11월에 실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에 이어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었으며, 2013년 3월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에 임명되면서 당·정·군을 통솔하는 최고의 지도자 지위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에 오르자 마자 2012년 12월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하여 동북아의 안보를 흔들었고. 또한 3월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을 앞둔 2013년 2월에는 제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중국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행위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은 중국에게 국제무대에서 북 외교력을 시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부터 북한문제로 곤경에 빠져들게 되었다.

시진핑에게는 정권 출범 초기에 안정적인 주변국 정세가 중요한 시점인데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체계의 위협과 안정을 뒤흔드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시진핑 체제의 출범부터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이은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아시아로의 귀환(Return to Asia)’을 외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동북아 지역 개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심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급성장 을 거듭하면서 미국을 조만간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인 여론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의 북중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집권 전, 후의 시기에 북중관계는 원만한 발전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2년 7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만난 북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박의춘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환보시구의 사설 “핵보유 명시화 반대”(2007. 7. 2) 게재와 관련해 고성을

외교문제 등 중요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人民日報』, 2010. 5. 7).

50)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 8期, p.38. 재인용, 박병광, (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p.20

지르는 등 의 항의로 양측의 접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적이 있고, 작년 한 해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적 고립에서의 탈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장성택의 베이징 방문 이외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더욱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지위에 오른 이후에 현재까지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에 북한은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보다 오히려 외교행보를 다각화하고 중국에 대한 심한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감싸기라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일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국관리자 역할과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완전한 수렴은 북핵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단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한국, 미국,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향한 무력도발이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은 어느 때 보다도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라는 합의를 달성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중국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북한에 대해 취할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는 동의해 왔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언제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주장은 중국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기대를 높이는 부분이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될수록 중국의 반(反)북한 정서와 대북정책 조정과 관련한 요구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중국정부는 북중관계를 적용하는데 있어 ‘이데올로기’와 ‘전략적이익’이라는 기준의 잣대뿐 아니라 ‘민심(民心)’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시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지도부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중국의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할지는 아직은 미지수 인 것이다. 중국내 북한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주장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대북정책 조정

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 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 현재까지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분간 중국은 현재와 동일한 대북정책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⁵¹⁾ 그 이유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 지도부와 민중의 분노를 산 것이 분명하지만 대북정책기조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충격(impact)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할수록 중국이 받는 놀라움이나 충격 자체에는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제1, 2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 ‘해결사’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입장에 선다는 내부 합의를 이룬 상태이며 제3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 북중관계 관리에 치중하는 대응적 정책을 마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둘째,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미중 대결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완충지대’와 ‘전략적 카드’ 등으로서 북한의 가치는 중국 입장에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변화(regime change)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고한 신뢰구조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택이다. 결국에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략적 자산의 상실 가능성을 감수하기 보다 일단 김정은 체제를 다독이며 양국의 새로운 지도부 간 유대 강화에 힘쓸 것이라는 점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은 기존 대북정책 전환으로 따른 ‘대북 영향력 상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핵문제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지속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과거 경험에서 터득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의 측면도 작용한다. 즉, 중국은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 이후 공개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하고 UN안보리 결의안(1695호) 통과를 지지하였으며, 9월에는 북한

51) 위의 논문, pp.25~26

에게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의 공급을 제한하기도 했다.⁵²⁾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생각과 달리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는 북중관계의 심각한 변화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위기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그해 10월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제3차 핵실험을 이유로 대북 영향력 상실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정책의 전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넷째, 시진핑 지도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부패 척결 등의 대내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이다. 이로인해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공작 보고에서는 대부분의 강조점과 향후과제가 국내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교사항에 관해서는 높지 않았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을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굳이 대북정책의 조정에 따라 북중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변국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당분간은 내부정치에 집중하면서 불안정한 경제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대미, 대일관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우선사항을 대외정책의 처리 우선순위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언제까지나 이상태로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 단계는 중국과 북한에 있어서 ‘상호 갈등과 모순이 축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금번 제3차 핵실험은 이런 모순의 축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북중 양국 간의 모순 축적이 고착화가 지속 된다면 결국 멀지 않아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변화는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 일종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시진핑의 지도체제가 공고화 되어지고 독자적 정책결정권과 자율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집권 2기에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⁵³⁾

3) 일본의 반응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저자세 외교’였다. 즉, 국제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정치, 안보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관여를 자제하면서 경제적인 실익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이었다. 일본 사회에서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전후 체

52) 박병광, (2010),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p.67

53) 박병광, (2013), 앞의 논문, p.28

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나 이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자재하였고, 국제환경과 내각의 이념성향 등에 의해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주변국 안보 현안에 대해 일본정부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은 취했다. 하지만 최근의 일본은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대외 관여를 확대하고 명확히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배경엔 일본 사회가 총체적인 보수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장기간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 잦은 내각의 교체와 정치적 불안, 중국의 급부상과 일·중의 경제력 역전, 중국 군사력의 증강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지역질서의 불안정 등으로 일본 국민은 자신감을 상실은 물론 국가안보의 위기감을 느꼈다. 일본은 국가전략에서 이른바 '보통국가'나 '정상국가' 노선이 정착되었고, 과거사와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국수주의적인 주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가 추구한 외교정책은 종래의 경제외교와의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UN 평화유지활동(PKO)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관해서는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통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호주, 인도 등과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련 법제화,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헌법개정의 움직임 등과 같은 일본이 주장하는 '보통국가'를 향한 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르고 있다. 2006년 출범한 제1차 아베정권은 대내적으로는 평화헌법의 개정과 교육개혁 같은 국가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강한 일본'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노선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통국가로 가는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베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전후 체제'와의 결별의 하고자 하며, 자위대의 군대화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한 보통국가화로의 제도적 완성⁵⁴⁾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제2차 아베정권도 이러한 노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군사적으로도 보통국가화 작업을 가속화하여 자신들의 방위력과 미·일동맹 강화를 달성하고 역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이처럼 최근에 정치성과 보수적이 성향이 두드러지고 일본의 적극적 외교는 북한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본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

54) 중앙일보, 2012년 1월 6일

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미일동맹 재편·강화에도 기여했다.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해 동북아 안보 불안요소로서 규정하고, 양국의 정보공유와 군사협력, 그리고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해 왔다. 북한 문제는 일본의 정치 보수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일본 정계에서의 사회당(사민당), 공산당 등 진보적, 혁신적 진영의 몰락은 북한에 의해 일본인의 납북자 문제가 정치 대결의 이념구도 속에서 이슈화 되면서 북한의 위협론이 일본 사회에 넓게 확산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는 중도보수의 기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참패하고, 자민당과 함께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會), 모두의당(みんなの党) 등의 보수우익 성향의 강한 신생정당이 약진한 배경은 중국 위협론과 함께 북한의 위협론이 일본 사회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문제는 정치 기반이 취약했던 아베신조(安倍晋三)가 빠른 시간에 보수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일본에서의 역사미화와 영토주권, 애국심의 교육강화, 평화헌법의 개정 등이 추진 될 경우, 그 재료로 북한 문제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후하다⁵⁵⁾

한편 일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으며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이 NPT 체제에 근간을 둔 국제사회의 비핵화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결의(2087호)가 발표되자마자 감행한 연이은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는 엄중한 사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직후 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해 혹시 모르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라고 지시했다. 예상되는 방사능 물질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하에 모니터링을 강화 할 것을 주문하는 등의 준비된 매뉴얼에 따르는 민첩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UN 대북제재와 일본의 단독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북 수출의 전면금지, 북한국적의 선박 입항금지, 300만 엔 이상의 대북 송금 시 신고,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시 처벌하는

55) 조양현, (2013), “북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p.47

등 이미 대북 단독제재를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핵 실험직전, UN 안보리 결의(2087호)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독자적 자산동결조치를 발표하였다. 추가 제재로는 대북송금 시 의무신고 상한선 인하, 조총련의 방북 제한 대상자 확대와 재입국 불허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⁵⁶⁾

4) 러시아의 반응

국내의 정치적 배경에서 어느국가에 못지않게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가 필요한 러시아는 제3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행동에 몹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오랜 인접 우방국으로서의 역사를 가진 국가의 행동이란 점에서 더욱 유감”이라는 점을 첫 공식 성명의 서두에서 밝혔다는 사실은 크렘린⁵⁷⁾ 내부의 분위기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푸틴집권기 경제력 회복과 함께 지구상의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국익차원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이 ‘문제국가’로 치부하는 북한, 이란, 시리아를 비롯한 남미의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가 그 예이다.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에 보여준 북·러 관계는 러시아와 북한 양국의 대미 견제입장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UN과 기타 다자기구에서 세계질서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대한 반대,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사용등과 같은 문제에서 공동적이거나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상호지지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진단과 처방에서 늘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신중하자’는 입장을 펴면서 미국과 적극적 공조를 피해 왔다.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선언 시에는 미국의 민주정치 특수성 즉, 입법, 사법부의 제도적 관계와 여론의 중요성 등을 북한에 이해시키기 보다 미국 행정부의 의도를 먼저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차 핵실험 후에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만이 협상결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였고, UN 안보리결의(제874호) 채택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수용하였지만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실험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평화적인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도

56) 함형필외, (2013),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정치·군사적 합의와 우리의 대응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1451호 p.6

57) 중세 러시아의 성새(城塞)·성벽(城壁)으로, 오랫동안 러시아 황제의 거성(居城)이었으나 18세기 초 페테르스부르크(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동궁(冬宮)’이 세워지면서 황거(皇居)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1918년 이후 소련 정부의 본거가 되었다.

포괄하기 때문에 지나친 제재라며 문제 시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러시아의 외교 엘리트와 전문가들 중 많은 이들은 안보리 제재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북한을 더 호전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NPT를 탈퇴와 장거리 로켓발사, 핵실험까지 했음에도 북핵문제를 북·미간의 정치문제로만 여기는 러시아의 관행적인 태도가 이번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불식 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한편 러시아는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합당한 조치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며 국제법상의 규정과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은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UN 안보리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NPT 및 IAEA 보장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재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대북시각에 대해 이례적으로 명쾌히 설명한 자신의 기고문⁵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군사적인 핵보유 불용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적 행동이 한반도 안정과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주변국들의 군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구실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UN 안보리의 제재에도 참여 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중국과는 다소 차별된 입장을 보이고 별도의 제재는 고려치 않고 있음을 내세우며 한국, 미국, 일본의 입장과도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러시아의 중립적 태도는 곧바로 가시화된 한·미 양국의 군사력 시위와 일본의 강경한 대처를 지켜보며 중국과 더 긴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북제재 이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러시아도 과도한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한다는 중국입장과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후 북한의 도발 행동이 계속 될 때마다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크림린 측의 경고성 대응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변화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⁵⁹⁾

58) 여인곤외,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2012~2013“북·러 관계, 러·일관계』. 통일연구원, p.58

59) 함형필외, 앞의 논문, P. 7

제 4 장 군사적 대응전략과 향후 전망

제1절 군사적 대응전략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감행으로 북한의 대남 핵위협은 급박하며 기존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여 직접 공격한다면 대량살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같이 직접 핵공격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공격이 예상될 경우 미국의 북한 핵공격도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므로 북한이 선불리 핵공격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상호확증파괴의 위험성 때문에 핵무기의 사용은 그 만큼 어렵게 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실제로 한국에 대해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항상 이와같은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북한체제의 독특성은 익히 알려져 있고, 핵개발 과정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은 생각지도 못한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실행해 옮긴다. 북한은 그들의 핵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보다 과감한 도발을 감행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북한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동맹관계에 기반으로 하는 한미연합 군사력의 대북 억지력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보인 군사적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즉 서해 해상경계선인 NLL에 대하여 단순 부정으로 출발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상에서의 충돌을 자행해 오다가 핵실험 이후에 연평도를 포격 도발하는 생각지도 과감한 군사적 도발을 실행 하였다.

6.25 전쟁이후 남북간에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전면전과 같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억지되어 온 채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두고 설명 할 수 있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에 주둔한 미군의 전력이 억지력으로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주한미군의 억지력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으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북한이 심각한 대남 군사적 공격을 벌인 후 한반도의 핵전쟁을 운운하면서 협상을 제시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반도의 핵전쟁 우려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등의 이유로 대북 군사적 보복적 대응을 자제도록 할 가능성이 놓후하며 우리 또한 핵 확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만 입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제 새로운 군사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제4장에서는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자위적 핵 개발 전략

자위적 핵 개발은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핵 억지 이론 중 자위적권 대응에서 출발한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핵 무력증강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비핵화라는 틀에 얹매이지 않고,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으로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핵의 ‘공포의 균형’ 논리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지된다는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핵무기는 군사무기이면서 정치무기라고 하며 “북한 핵이 자위용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잘못된 주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폐기됐음을 공표하는 등 과거 같은 노력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⁶⁰⁾ 또 정 의원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사전에 막아 줄 것이므로 동북아의 핵도미노를 현상은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중국의 근시안적 인식이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은 매우 긴밀하고 확고지만 국가이익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자위력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게 핵 선택권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김 대중 조선일보 고문도 독자적 핵 보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주장하였고, 핵 안보전문가 이춘근은 자위권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는

60) 정몽준. 2013년 4월 10일.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독자적 핵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자위적 핵무장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강경책’이 아니며 “여러가지 나쁜 방안 중 가장 덜 나쁜 것이 핵무장”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소규모 핵능력으로 핵강대국인 미국의 자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전을 위한 군사적 전략 선택으로 인식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이론상 최소억지 (minimal deterrence)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면, 북한의 핵개발은 이론상으로도 쉽게 포기시키기 어렵다. 이에 독자적 핵개발은 만일 미국의 신뢰 할 만한 핵 억지력을 통해 완전히 보장 받을 수 없다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한국은 독자적 핵 보유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어 진다. 독자적인 핵 개발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선택이므로 북핵문제의 해결 시 우리도 즉각적으로 폐기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핵개발을 현실화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추락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중단이 아니라 동북아의 핵 경쟁으로 나가는 것이며 이는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전술핵 재도입 전략

전술핵 재도입은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하여 배치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된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적인 핵 억지력의 보유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NPT 체제 하에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중 일부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는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⁶¹⁾, 원유철은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등을 통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주장 등을 하였다. 정몽준은 북핵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독자적인 핵개발 이외에 추가로 전술핵 재도입을

61) 송대성. 2013년 3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 위기의 대응” 세미나에서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장 서명하고 20년간 핵을 개발해 결국 핵보유국이 됐다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하고 있다. 송대성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의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정몽준은 “전술핵은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재도입 하더라도 한국은 NPT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모든 것을 1992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도입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과 위배되며, 중국의 민감 거부 반응의 가능성,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 증강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이용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자위권적 핵보유에 비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술핵 보유는 크게보면 다음의 핵우산 강화 전략에서도 연관이 되므로 추가로 논의 하고자 한다.

3. 핵우산 강화 전략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만일 대남 핵공격을 감행하면 전술무기 및 전략인 핵무기로 몇십, 몇 백배의 응징적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핵 보복공격을 주저없이 감행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될 경우 미국의 핵보복 역시 제한되거나 위축 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탑재한다고 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의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결국 미국의 핵우산은 실현하기가 힘든 ‘선언적 수단’으로서 전략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우산의 이 같은 결함을 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핵위협을 본격화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에 전술핵 재배치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므로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자는 것이다. 한반도내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핵우산 적용의지를 북한에 한층 더 직접적으로 각인시켜 줄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한반도내에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핵우산 강화는 한국 및 미국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리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전술핵 재배치도 ‘핵 없는 세계’를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다.

핵우산 강화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미국이 보다 신뢰성 있는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서 북한의 핵을 억지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화장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에게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도 자체적인 억지력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미국과 전면 대결전을 선언하고 핵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B-52와 B-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샤이안 핵잠수함 등의 전력이 한반도 전개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강화한 것은 유사시 핵우산의 제공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의 대표적 주장은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기자이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비현실적이며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동해상에 상시 배치하자고 제안하였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내에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전술핵 재도입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면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응방법으로 여겨진다.

4. 선제타격 전략

북한의 핵무기 사용위협이 노골화되고 임박 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에 대해 선제타격으로 핵무장을 무력화 시킨 것처럼 사전에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북한 핵무기 공격을 허용할 수 없는 것 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 공격을 감행하려는 구체적이고 임박한 동태와 정 보가 포착되는 경우, 북한의 핵 사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UN 안보리의 사전 결의없이 군사적 선제행동을 취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은 없다.”⁶²⁾ 라는 것은 핵억지의 논리 중 예방적 자위권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타격의 불가피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 북한의 핵 공격이 예고없이 진행

62) 박휘락, (2012), “북한 핵무기 무력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안”, 북핵과 통일안보 국제 세미나. p.126

될 개연성이 있는 ‘대량살상무기 시대’인 오늘날 한국이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비인도적인 것 일 수 있다는⁶³⁾ 평가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제행동을 위해 다양한 대안과 수반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면서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실행 할 수 있는 계획의 발전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의 악화에 대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극단적인 상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사용 움직임을 조기에 경보하고, 필요시 핵무기와 관련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한 폭격능력을 향상시키며, 지휘통제체계를 발전 시키고, 감시와 정찰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현재의 심각한 사태가 도래한 것은 한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미룬 탓이고, 계속해서 미룰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모두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제 핵타격 전략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것과 ‘찢어진 핵우산’에 대한 우려로부터 신뢰 할 만한 하며 핵 이외의 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핵을 억지 하려는 논리이다. 한국은 천안함 폭침 사태후 임시로 구성된 국가 안보 총괄점검 회의에서 북한 군사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능동적인 억지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능동적인 억지전략이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으로 도발하려 할 때 북한 지휘체계와 주요 공격수단을 미리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 전쟁을 억지하는 전략”이다.⁶⁴⁾ 능동적 억지전략은 문제 해결을 선제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보유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는 2013년 4월 1일에 능동적인 억지전략 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위협으로부터 억지하는 전략을 구축 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능동적인 억지전략은 북한의 핵을 위기상황으로 보며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면서 대남 위협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징후 포착 30분 이내에 도발을 준비하는 원점을 압도적으로 선제 타격하여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63) 위의 논문, p.127

64) 박영호, (2013), “한국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통일과 평화 5집, p.26

5.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략

북한 핵무기 사용을 억지 위한 가장 시급한 분야는 바로 미사일 방어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해 독자적 방어능력을 전혀 구비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이 1993년 NPT를 탈퇴한 이후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의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후, 2006년의 북한의 핵 실험, 2009년의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제2차 핵 실험에 자극을 받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더욱 가속화 한 결과 직격파괴 능력을 지닌 PAC-3 미사일을 주요한 도시에 근처에 배치하였고, 해상은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에 배치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오해와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계속 미뤄둔 상황이다.⁶⁵⁾ 비록 아직까지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지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짧은 종심으로 인해 미사일 방어가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한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모습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⁶⁶⁾ 일반적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한국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확보로 그 중점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표적 정보수집 체계, 조기경보체계, 장거리 타격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사이버전 체계, 신종 파괴무기체계, 전자기파 방호체계, 개인·부대·시설 방호 장구 및 생존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거부와 응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제거가 가능도록 북한의 전략적 표적을 우선 식별하고, 타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표적별로 타격방법과 임무를 할당하고, 확실한 성공을 보장 할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무기 위협이 이와같이 심각하고, 이에따른 거부 및 응징력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일반적 전력증강의 보강은 의미가 없다. 나아가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 할 경우 즉각 보복 할 수 있도록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과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응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만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듯 자체

65) 정철호, (2013),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 세종연구소, p.28

66) 조선일보. 2013년 2월 13일

핵무장의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⁷⁾ 국가의 안보가 절대적으로 위협받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 2 절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과 향후전망

1.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국제적 협력의 균형을 이루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간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6자회담과 한·미·중간의 전략대화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 동력강화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상응하는 정치적·경제적·외교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⁶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느슨한 연계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여러번 좌절된 것에 대한 반성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준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비핵화 정책 추진으로 냉냉한 남북관계가 지속된 점을 감안한 절충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비핵화, 후남북관계’ 구도에서 벗어나 비핵화 이전에도 ‘낮은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인도지원’을 추진해 나가므로서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⁶⁹⁾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의 ‘신뢰’란 무조건적, 일방적 믿음이 아니라, 상호간에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강조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긍정적 신뢰가 축적되도록 만드는 것이며 ‘신뢰’는 일방적인 신뢰가 아니라 한 “믿지만 검증 하라 (Trust, but verify)”⁷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서 핵위협이나 군사도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노력하여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도발징후 식별 및 도발 시 철저한 응징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부근과 서북도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으로 ‘억지-선제타격-방

67) 정영태, (2013), “북한핵무장 대응방안”, 신년 긴급국민 대토론회. p26

68)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2013년 2월 25일

69) 최진우 외, (201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p.3

70) 미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대(對)소련문제에서 적용

어' 등 3단계의 미래 지향적 포괄 방위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다수보유로 도발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chain)⁷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하여 한·미 학장 억지 정책위원회를 통한 한반도 전략 환경에 부합되는 맞춤형 억지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이루어지는 전시 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가 안보실을 설치, 대북정책 총괄조정 능력과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균형성, 포괄성, 능동성, 단계성의 4개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포용정책, 봉쇄정책등 단적이고 일방적인 대북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수단과 노선의 '균형성'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과 압박에 대해 양자택일적인 접근법으로 추진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압박을 추진하면서도, 남북간 경협과 인도부분에서는 포용정책을 병행해 균형적으로 추진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균형정책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사안보와 교류협력, 남북대화와 국제적인협력, 협상과 억지등의 의견대립적인 정책요소를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조율(alignment)'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행복한 통일시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등의 다면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대북전략을 모색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에 각각의 분야에서 단절되어 추진되었던 국방, 통일, 외교정책을 모두 동일목표를 향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국가안보실 체제도 도입하여 안

71)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과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 전력, 공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각각 동원된다.

보에 관한 문제는 각 부처가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교착에 대하여 기존과 같은 대응적이며 파동적인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능동적(proactive)’인 접근을 모색하도록 하여 과거의 대북정책이 남북간 깊은 상호불신으로 개선 가능성을 잃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취임사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수는 없다.”고 했듯이 한반도 비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남북문제를 급하게 서둘러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상호신뢰의 축적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대북정책이 정상회담으로 정치·외교적 빅딜을 추구하였다면, 취임사에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 하였듯 형식적인 성과주의 보다는 단계적인 신뢰구축을 통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2. 향후전망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통해 대체로 대미협상을 하는데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전략적인 카드로 인식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90년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까지의 북한 협상행태를 볼 때 적어도 핵개발은 조건이 맞으면 포기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서문을 공개 하였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하였다는 것과, 자위권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법령제정 등 핵보유의 사실을 법제화를 통해 밝히고 있다. 선군정치, 그리고 핵개발이 김일성·김정일의 최대의 업적으로 칭송하고 핵개발을 통한 체제유지와 주민들의 단결과 결속을 유지하는 등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핵무기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실제 핵을 보유하고 확대하려는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강력한 핵억지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세계에 우뚝 내세워주신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한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2003년 6월 16일 미국을 상대로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지금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핵이 없는 세계의 건설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하면서 핵보유의 궁극적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 시 정책으로 인해 핵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군축협상이나 평화체제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또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여 재래식 무기 의존도를 줄여 국방비를 감축하고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핵보유는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문제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이러한 노선을 통해 ‘방위력 강화와 경제건설을 같이 이룬 강성대국’에서 생활 할 수 있을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령 제3조에서는 “핵 억지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여 핵무기의 소령화와 경량화, 다종화를 위하여 핵실험과 로켓발사 등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병진노선에서는 경수로의 개발을 위해 자립적 핵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업발전, 통신위성의 발사를 통한 과학우주기술 발전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핵연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미사일 기술 확보 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제3차 핵실험과 핵보유의 법제화 이후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의 핵정책은 핵을 단순히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라 실전에서 배치하여 사용 할 수도 있는 무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현 체제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핵개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후반기에는 중국의 권고와 중재에 따라 대화모드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나 이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으로 훼손된 북·중관계를 회복하고, 협상국면의 조성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 재개등의 방식으로서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으나 미·북 간 큰 입장차이로 쉽게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우다웨이의 방북을 통해 9.19 공동성명 준수 및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러시아 또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6자회

남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에 대해 동조하고 있으나 실제 6자회담이 재개될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으로 인해 내부적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 회담이나 협상진행의 진행은 내부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대남 군사적인 도발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통해 남북, 북미간의 긴장고조 시켜 내부결속과 체계안정을 확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점으로 미뤄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결 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핵을 보유한다는 자체가 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냉전시대에 유지되었던 북·중이나 북·소 동맹체제와 같은 최소한의 안보에 대한 안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회담을 통해 핵보유에 반발하는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제한된 핵 억지력을 인정받고자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제3차 핵실험을 통해 비춰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을 넘어 국가발전 전략의 단계로 진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적 강국의 토대 위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기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박근혜 정권은 핵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정에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지난 20여년 간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결의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국의 대응전략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나 6자회담, 다자협의나 양자, 3자 등의 다양한 협의의장을 통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된 대응전략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확립 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신뢰의 확보는 국제적 차원의 신뢰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는 문제 해결의 튼튼한 토대이자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다. UN의 대북결의안에 의한 대북제재를 실시하면서도 협상 여건을 모색하는 이중적 전략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관련국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가동해야 한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해 3국간 협의하에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듯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면 최선의 결말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체제의 유

지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강구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해 온 측면이 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성하겠다는 희망이 큰 탓도 있지만,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거나 미군의 확장억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자 노력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의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으로 위협하는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게는 강력한 군사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앞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또 전술핵 재배치도 ‘핵 없는 세계’를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선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상황별 가용 및 대응전략을 심각하게 논의하며, 다수의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지리적으로 불리한점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안전한 방안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도 전략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 파괴하는 기술과 무기체계가 개발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다.

한국은 주요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신속히 확보한 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미사일 방어 청사진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군사적인 대응전략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국방부(2012), 『2012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박재영(2009),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박형중 외(2013),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통일연구원.

박휘락(2013), 『북핵 위협과 대응 : 국방전문가가 말하는 북한 핵무기의
오해와 진실』, 한국학술정보.

윤영관(2008),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한울 아카데미.

여인곤 외.(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이춘근(2007),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사.

이근육(2011),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출판사.

정철호(2013),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세종연구소.

전성훈 외(2013),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최진욱 외(201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황장엽(2001),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월간조선사.

[논문 / 학술연구]

고봉준(2008),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안일 양국 대응
의 공격현실주의적 해석”, 한국정치학회. Vol.42 No2.

구본학(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책”, 안보현안분석 Vol 80.
국방대 :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권용수(2013),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평가”, 안보현안분석
Vol.80. 2월호

- 김재철(2013),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제 27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 김종선(2013), “북한 핵기술 어디까지 왔나”, 북한연구소. No.496.
- 김찬규(2009), “무력공격의 개념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인도법 논총. 29호
- 김태우(2010), “북한 핵개발과 확대억제 강화 필요성”, 한국국방연구원.
- 김현수(2004),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23호.
- 문순보(2010), “공세적 현실주의와 동북아 안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 박병광(2010),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 박병광(2011),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관계”, KDI북한경제리뷰 8월호.
- 박병광(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 박영호(2013),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통일과 평화 5집 1호. 평화통일연구원.
- 박인희(2013),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보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제 27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 박휘락(2013),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국방연구. 56권 제1호.
- 박휘락(2012), “북한 핵무기 무력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안”, 북핵과 통일안보 국제 세미나.
- 설인효·이택선(2012),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단국대학교. Vol.10 No.2.
- 손용우(2007),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국제정치논집. 제 52집 3호
- 윤정희(2013),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는가? : 현실주의시각”, 고려대학원.
- 전성훈(2013),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정책: 분석과 전망”, Online Series CO 13-08 : 통일연구원.
- 전현준(2013),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협 배경 분석”, Online Series CO 13-05 : 통일연구원.
- 정영태(2013), “북한핵무장 대응방안”, 신년 긴급국민 대토론회.

- 조양현(2013), “북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p.47
- 함형필 외(2013),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정치·군사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451호(13-8). 국방연구원.
- 함형필(2013),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능력 평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가?”. 국방연구원
- 홍우택(2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 황지환(2007),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 현상유지 경행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Vol.47 No.3.
- 황지환(2006),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국제정치논의 제46집 1호

2. 국외문헌

- Adler, Emanuel(2009), “Complex Deterrence in the Asymmetric–Warfare Era.”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reguin-Toft, Ivan(2009), “Unconventional Deterrence: How the Weak Deter the Strong.”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awford, Timothy(2009), “The Endurance of Extended Deterrence : Continuity, Change, and Complexity in Theory and Practice.”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onen, Olli(2012).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38 *North.org*.
- Jackson, Van(2012), “Extended Deterrence and Dealing with Regional Contingencies.” a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U.S.-ROK Strategic Dialogue. Royal Lahaina Resort, Maui.
- Jervis, Robert(2009), “Deterrence, Rogue States, and the U.S. Policy.”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RDC(2003),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Pabian, Frank and Siegfried Hecker(2012), “Contemplating a Thir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 rea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 Focuseding on the third North
Korea's nuclear test

Hwang, Hyun-Shik

Military Strategy. Major in SecurityTactics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Defence Science
Hansung University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February 12th 2013, after about an year of Kim jung-en's regime, North Korea (nK) executed it's 3rd nuclear test. Such an action can be viewed into two aspects. First, the test was to establish an image as a 'strong leader', and to make the world acknowledge that they possess a nuclear weapon. Considering that this test has shown the potential of HEU production which leads to development of loading minimized ICBM weapons. The nuclear threat of nK is known imminent.

It has been 20years since the first nuclear threat and 10years since the six-party talk. ROK has been hindering the property of the nuclear weapons of nK by showing diverse efforts such as economic aid, ROK-US military cooperation, and counter-north negotiation. However, such efforts could not stop the nuclear development of nK which led to the 3rd nuclear test.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military counter strategy for the

solution of the nK nuclear crisis. Of course, peaceful diplomatic methods, such as six-parties talk, multiple diplomatic agreements,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all crisis. Unfortunately, it seems best to approach in a rather realistic way.

First of all, I examined the realistic view in what background nK had possess a nuclear weapon. Also, by using the deterrence theory. I will explain the nuclear deterrence of the ROK to nK.

Next I analyzed the response of the nearby countries and U.S, Russia about the limitation of the six-party talk, the intention of nK and level of this 3rd nuclear threat.

Lastly, I examined the many military countries strategi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ke, enhancement of nuclear umbrella, preemptive strike, etc. I will compare and analyze such strategies in realistic possibility, effectiveness of the optimal military solution to the nK nuclear crisis.

【Key words】Nuclear deterrence, Possess a nuclear weapon,
Preemptive strike, Military countries strategies